

## 01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 ②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는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 ④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문제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③ (X)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 정부)와의 협력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개념에는 국가와의 협력을 내포하기 때문에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 ③

## 02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 「지방세기본법」상 세목과 과세주체에 따른 지방세를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자동차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 ② 주민세 - 자치구세, 시·군세
- ③ 지방소비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 ④ 등록면허세 - 자치구세, 시·군세

**해설**

- ① (X) 자동차세: 취득소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아님 → 시·군세(도세 X)
- ② (X) 주민세: 등재(등록면허세, 재산세) 아님 → 특별시·광역시세(자치구세 X)
- ④ (X) 등록면허세: 취득소비세 → 도세(시·군세 X)

**정답** ③

## 03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광역시보다 많아 폭넓은 세금의 부과·징수를 보장받고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해설**

- ① (X)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조).
- ② (X) 특례시의 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X).
- ③ (X)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어 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광역시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가 특별·광역시보다 세목의 종류가 적고, 2020년 지방세 수입 규모의 경우 도는 267,362억원, 특별·광역시는 339,867억원(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인 점을 고려해 보면, 도가 폭넓은 세금의 부과·징수를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④ (O)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읍·면에는 리를 둔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특별시의 사무 특례) 특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④

04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 ③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 ② (X)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③ (X)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출석의원 X) 과 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 ④ (X)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제62조(의장·부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답 ①

05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② 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전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40조
- ② (X)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O)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자치법」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전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②

## 06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사무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② (X)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사무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③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 ④ (O)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③ 제1항 제2호 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제4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②

## 07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의 과정 중 편성 과정에만 주민참여를 허용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고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 해설

- ① (O) 「지방재정법」 제59조
- ② (X)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X)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④ (X)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정답 ①

08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지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주어진다.
- ③ 지방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해설

- ① (O) 「지방공무원법」 제19조
- ② (X)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③ (X)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거나 사전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자문위원회 성격 X).
- ④ (X)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각하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

정답 ①

09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우리나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주민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 ② 수수료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
- ④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 ②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③ (X)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③

10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② 국제조약도 지방자치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 ③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한다.
- ④ 「지방자치법」은 각 분야별 법률들에 비하여 종합법의 성격을 갖고, 각 특별법 등에 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

- ① (X)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할 때는 법률로 정합니다(헌법에 위반 X).
- ③ (O) 헌법 제117조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①

11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 ③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25조
- ② (X) 18세가 아닌 19세 이상의 주민입니다.
- ③ (O)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 ④ (O)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와 확정) ①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정답 ②

12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지역구 도의원의 의원정수는 최소 25명으로 한다.
- ③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한다.
- ④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해설

- ① (X)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X) 지역구 도의원의 정수는 최소 19명입니다.
- ③ (X)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합니다.
- ④ (O) 「공직선거법」 제2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인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정답 ④

13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 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산광역시의 규칙 개정
- ②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 ③ 대통령령 개정
- ④ 지방자치법 개정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정답 ③

14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지방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
- ② 지방세는 응익부담 원칙이, 지방세외수입은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지방세외수입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④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낮다.

해설

- ①, ③ (O) 세외수입은 그 수입의 근거·종류·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불규칙적인 수입입니다.
- ② (X), ④ (O) 세외수입은 공공시설의 사용,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특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여 조세수입과는 달리 재원조달에 있어 마찰이나 저항이 적습니다.

정답 ②

15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
- ② 군
- ③ 읍
- ④ 면

해설

군은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 읍, 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정답 ②

16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
- ② (O)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 ③ (X)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X)
- ④ (O)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③

## 17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총 26명일 때,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최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 ① 13명
- ② 26명
- ③ 36명
- ④ 52명

### 해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총 26명일 때는 13명 범위에서 둘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정답 ①

## 18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제13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유림 관리
- ② 주민등록 관리
- ③ 가축전염병 예방
- ④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해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차. 주민등록 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사. 공유림 관리
- 자. 가축전염병 예방

정답 ④

19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회의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 ② (O)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
- ③ (X) 대통령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회의의원은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③

20

2023 서울 7급 지방자치론

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 의회·행정담당관(Council-Manager)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20세기 중반 시장의 전문성과 행정직·정치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 ② 해당 제도를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80% 이상의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며, 시장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③ 시장과 의회는 행정담당관을 임명·해고할 수 있고,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최고 관리 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를 두어 시장을 보좌하게 한다.
- ④ 행정담당관은 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

해설

- ① (X) 의회·행정담당관 형태는 1910년대의 행정 개혁기에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을 받아 지배인제도를 행정에 도입한 것으로 현재 미국 자치단체의 과반수(대부분 중소도시)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명예직으로서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 ② (X) 의회·행정담당관 형태에서 시장은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원들 가운데 선출됩니다.
- ③ (X) 시장은 임면·파면권을 보유하지 못하며 시장관리인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 ④ (O) 행정담당관은 모든 시의 행정에 대한 감독·지시권, 부서장의 임면권, 예산 편성권, 시의회에 대한 권고권 등을 가지며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정답 ④